

# 가상자산 입법안 기본 방향과 쟁점

2022.1.25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# 강연자 소개



## 권오훈 변호사

-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
-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위원회 위원
-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
- 서울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
- 과기정통부/NIPA 블록체인 규제개선 자문위원
-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위원

[ohkwon@chakwon.com](mailto:ohkwon@chakwon.com)

02-3495-0957

# 개요

- “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” 논의안
  - ✓ 금융위원회 작성 2021. 11. 23. 정무위 법안소위 내부토의용 자료 기반
  - ✓ 각종 의원입법안 비교 분석
  - ✓ 이용우, 김병욱, 양경숙, 권은희, 민형배, 윤창현, 김은혜안 등 13개 발의안 검토

# 기본원칙

-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, 규제탄력성 확보

- ✓ 제정목적

-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우선
- 이용자보호와 블록체인산업 진흥 균형감 유지

- ✓ 원칙중심의 규제체계

- 법률에서는 이용자 보호원칙과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 둠
- 하위 규정을 통하여 구체화

# 기본원칙

-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, 규제탄력성 확보
  - ✓ 감독권한
    - 민간에게 자율규제 권한
    - 금융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
  - ✓ 법집행 체계
    - 자율적 상시 감시체계로 불공정행위 대응
    - 형사적 제재, 불법적 경제적 이익 환수
  - ✓ 국제기준 변화가 있는 경우 지속적 법령 보완, 개정

# 가상자산 정의

- 가상자산 정의

- ✓ 현행 특금법 +a

- 포괄적으로 정의하되, 타법상 규제 대상이거나 규제대상으로 삼기 부적절한 대상을 배제

- ✓ 증권형 토큰

- 원칙적 동법 적용, 증권 해당시 자본시장법 적용
- 자본시장법 규제 우선적용 방향 바람직

# 가상자산 정의

- 가상자산 정의

- ✓ 스테이블코인

- 동법적용
    - 발행자, 준거자산 예치, 운용, 유동성 등 규제장치 마련

- ✓ DeFi

-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규율
    - 자격요건 맞추어 등록

- ✓ NFT

- 가상자산 정의에 포섭되는 경우 동법 적용

# 가상자산 정의

- 쟁점

- ✓ 증권형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

- ✓ 자본시장법 상 증권의 개념도 매우 포괄적

- “금융투자상품”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,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①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②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
  -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은 증권



# 발행 규제

- 규제 범위

- ✓ 가상자산을 공모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 대상 의무 부과

- 규제내용

- ✓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제한

- ✓ 백서제출 의무

- 코인평가의견서, 법률의견서 등 첨부

- ✓ 발행공시

- ✓ 설명의무

# 발행 규제

- 공시규정 제정
  - ✓ 법령에서 공시기준, 절차 규정
  - ✓ 위반시 형사처벌
  - ✓ 공시시스템 - 발행인 자체 홈페이지 / 협회 홈페이지 / DART
- 주요 공시사항
  - ✓ 백서 관련 사항
  - ✓ 코인평가서
  - ✓ 법률의견서
  - ✓ 업무의견서 등

# 발행 규제

- 쟁점
  - ✓ 코인평가 기관의 전문성?
    - 법적 필수 요건 구비 필요
    - 다양한 경쟁 기관들 허용 필요
  - ✓ 설명의무, 업무보고서 등 내용
    - 증권 여부, 락업 기간, 환매 여부, 상장대가
    - 마켓메이킹 팀 여부
  - ✓ 백서 필수 기재 사항
    - 증권신고서에 준하는 내용?
    - 모집 매출에 관한 사항 - 일정, 증권의 주요내용(증권의 종류, 만기, 발행가액 등), 투자위험요소(회사위험, 사업위험, 기타 투자위험 등)
    - 발행인에 관한 사항 - 회사개요, 사업의 내용, 재무사항, 주요주주, 임직원 현황 등

# 공모자금 보호

- 자금 검증
  - ✓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공시만 수행
  - ✓ 공모자금 은행 예치 의무화
  - ✓ 운용계획, 사업계획 검증
- 감독 및 위반시 조치사항
  - ✓ 회계기준 위반시: 외감법에 따라 형사벌
  - ✓ 목적외 사용, 유용, 횡령: 형사벌, 배상책임 등

# 공모자금 보호

- 쟁점

- ✓ 공모자금 예치가 현실적인지?

- 회사 자본금의 경우에도 별도 예치하는 의무가 없음
- ICO는 일종의 선매출이라고 볼 수 있음
- 펀드에 준하는 예치 규제가 형평에 맞지 않음

# 상장, 유통 규제

- 상장, 유통공시 규정 제정
  - ✓ 1안: 법령에서 기준, 절차 규정 / 협회 자율규제 / 거래소가 자율적인 업무규정
  - ✓ 2안 : 1안 + 금융당국의 협회에 대한 시정권한
- 상장심사
  - ✓ 거래소가 업무규정에 따라 자체 심사
- 공시시스템
  - ✓ 협회가 공시시스템 운영, 발행인이 협회에 공시자료 제출
- 감독 및 위반 시
  - ✓ 법령사항 위반시 형사고발
  - ✓ 자율규제사항 위반시 협회 위약금

# 상장, 유통 규제

- 쟁점

- ✓ 상장 가상자산 관련 특금법과 중복되는 부분 해소 필요
- ✓ 현행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상장 토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은행도 부담
- ✓ 은행의 중복되는 리스크 제거 필요

# 가상자산업자 진입, 행위규제

- 진입규제

- ✓ 1안: 등록제 (P2P 대출업 수준)
- ✓ 2안: 인가제 (저축은행 수준)
- ✓ 발행업은 업으로 인정하기 곤란, 발행인 규제에서 포섭

- 진입규제 요건

- ✓ 현행 특금법상 요건 +a

- 영업행위 규정 제정: 법령에서 기준 제정 / 협회 자율규제 / 금융당국 시정권한

- 기타 인가 또는 등록취소 요건, 광고규제, 의무 및 금지사항 등



# 가상자산업자 진입, 행위규제

- 쟁점

- ✓ 현행 특금법 요건 정비 필요

- 이미 ISMS, 실명 확인 계좌 등 해외에 비해 강도 높은 요건
- 업권법 시행에 맞추어 현행 특금법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

- ✓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고려한 등록 요건

- 현금 교환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높은 자본금 요건 요구 가능
-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요건 없애거나 완화 필요

# 고객 예치금 보호

- 예치의무주체: 가상자산사업자
- 예치 방식: 예치, 신탁
  - ✓ 고객별 가상자산 분리 관리
- 고객예치 가상자산 보유의무
  - ✓ 동일종목, 동일수량 보유의무
- 콜드월렛 비율: 70% 권고
- 피해보상계약

# 불공정거래 규제

- 불공정거래 범위
  - ✓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
  - ✓ 시세조종
  - ✓ 부정거래
- 시장감시기능
  - ✓ 협회가 상시 감시
  - ✓ 중요위반행위에 대해 수사당국 통보

# 협회

- 법정 협회

- ✓ 자율규제, 분쟁조정 기능 법정협회 신규 설립

- 협회 회원

- ✓ 가상자산사업자 중심

- 이용자 보호 기금

- ✓ 피해자 배상 사업

- ✓ 소송지원 등 기금 조성

# 협회

- 쟁점
  - ✓ 일반적인 법정 협회의 한계
  - ✓ 다수의 자율 협회 구성 필요
  - ✓ 규제를 위한 하위 기관이 되어서는 안됨

# 추가 고려사항

- 현행법과의 관계

- ✓ 특금법

- 자금세탁방지 규정만 존치
    - 신고제 등은 가상자산법 이관
    - 등록심사시 FIU 참여 근거 조항

- ✓ 자본시장법

- 증권토큰 규율

- ✓ 외감법

- 가상자산발행인도 외부감사 대상 추가 검토

-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는 경우 허용
  - ✓ 별도 법으로 규율할 것인지?
    - 가상자산사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
  - ✓ 전면금지할 것인지?
  - ✓ 영업행위 규제의 적용범위, 대상 문제
    - DEX
    - 단순 예치
    - Yield Farming 등

# 발행 규제

- 발행시 규제

- ✓ 발행업 인정 필요 없음
- ✓ 발행인 자격, 백서 등에 대한 발행공시
- ✓ 자본시장법 상 유가증권 발행규제 적용 범위
  - 10억원 이상 모집 매출 시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,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, 공시 의무
- ✓ 공모자금 보관?
- ✓ 공모자금의 목적 외 사용 범위?

- 발행 이후 규제

- ✓ 외감법에 따라 정기 공시?
- ✓ 일반 회사는 주식발행에 따른 규제가 존재



# 가상자산사업자 진입, 행위 규제

- 진입규제 수준

- ✓ 등록제 중심- 강제력 부여에 한계?

- ✓ 인가제 도입할 것인지?

- 불법영업 처벌수준

- ✓ P2P업법에 준하여 처벌

- 무등록영업, 대주주 등 연계대출 위반: 3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

- 유사상호 사용: 1년 이하 징역, 3천만원 이하 벌금

- ✓ 인가제 도입시?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, 5억원 이하의 벌금?

# 가상자산사업자 진입, 행위 규제

- 영업행위 규제 범위

- ✓ 의무: 약관 제 · 개정시 공시, 거래안전성확보, 신의성실의무, 이해상충관리, 내부통제기준 마련, 실명확인, 상장 전 발행자 정보 확인, 이용자명부 작성 · 비치, 거래기록 생성 · 보존, 범죄이용 가상자산 거래중지 등
- ✓ 금지: 자금세탁, 방문판매 등 매매 · 중개, 명의대여, 계좌대여 알선 · 중개, 자체발행 가상자산 거래, 임 · 직원 매매거래, 수수료 외 금품 등 요구, 서비스 중지 등
- ✓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할 것인지? 스타트업?
- ✓ 금융소비자법 상 6대 판매규제?

# 불공정거래 규제

-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, 시세조종, 부정거래 금지
-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?
  - ✓ 요건을 완화 (목적성 없이 외형만 입증),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부과
- 별도의 감독 기관 구축?
  - ✓ 1안: 기존조직 활용 (금감원 + 금융위)
  - ✓ 2안: 가상자산시장 감시기구 + 디지털금융조사위원회

# | 기존 사업 및 가상자산

- 기존 신고업체, 발행 상장된 기존 가상자산에도 유예기간 부여 및 규제 적용
  - ✓ 특금법에 따라 신고한 업체 (1년 유예)
  - ✓ 공모발행 가상자산 - 발행자에게 발행공시 규정 적용 (처분유예기간 1년)
    - 법시행일을 제정후 1년, 1년 유예기간 부여 = 총 2년 준비기간
  - ✓ 상장 기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발행자에게 관련 규정 적용
- 쟁점
  - ✓ 법 시행일 이후의 업체 및 가상자산에만 적용?
  - ✓ FATF에 따르면 ICO 발행은 VASP가 아님. 그러나 ICO 판매 시 VASP. 이러한 규정에 대한 대비는?

감사합니다.

CHA & KWON

차·권 법률사무소

※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법률적인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·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차앤권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, 이 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